

auri brief.

건축공간연구원

No.227 2021.02.28

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안

염철호 선임연구위원, 김가람 연구원, 유예슬 연구원

● 요약

-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(2016~2020)이 종료됨에 따라 그간 추진된 정책성과와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의 여건 변화 분석을 통해 중기 계획 수립 필요
-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(2021~2025)의 건축자산의 보전·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목표,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를 담은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
-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은 ‘새롭게 만나는 건축자산’을 비전으로, 건축자산 진흥정책 추진 기반 강화, 건축자산 가치증진 및 민간시장 활성화, 한옥의 현대화 및 다양화의 3대 추진전략과 12대 추진과제로 구성

● 시사점

- 제1차 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의 성과진단 결과 정책대상의 모호성, 다양한 관련주체의 협력체계 미흡, 한옥과 건축자산에 대한 가치인식 부족, 관련 기술 개발 미흡 등이 문제점과 한계로 지적
-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한옥과 건축자산 정책의 핵심 대상을 설정하고, 건축자산 보전·활용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련 주체의 협력·지원체계를 구축
- 아울러 현장 중심의 다양한 건축자산 가치 증진 방안을 강구하고, 새로운 한옥 수요 창출과 한옥 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한 기술개발의 상용화, 세부기술·기준 마련, 생활 속 한옥 체험 기회 확대 등을 추진
- 중점 추진과제 선정 및 성과지표 관리, 법령 개정 우선 추진, 기본계획 기반의 정책 추진체계 정착, 중앙 지원-지자체 실행-관리-시민·민간 참여의 실행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계획의 실효성 확보 필요

| 주제어 | 한옥, 건축자산,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, 가치 증진, 시장 활성화, 현대화, 다양화

①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

●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성격

- 2014년 6월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·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한옥등건축자산법」) 제정
- 한옥 등 건축자산은 사회문화적, 경제적, 산업적으로 주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전·활용(건축자산)과 보급·확산(한옥)의 정책대상임
 - 지역의 형성 및 발전 과정과 함께한 한옥 등 건축자산은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창출 및 정체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
 - 창업공간 및 관광자원으로서 지역상권 활성화,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, 문화·관광 등 관련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및 성장 가능성 또한 큼
- 「한옥등건축자산법」 제4조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
 -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(동법 제5조)
- 「한옥등건축자산법」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5년 12월 ‘기억과 일상이 어우러진 건축, 풍요로운 삶의 자산’을 비전으로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(2016~2020)을 수립·시행

● 그간의 정책성과 진단 및 여건 변화를 고려한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추진

-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그동안 총 11개의 광역지자체가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, 건축자산 기초조사 실시,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, 한옥 산업화를 위한 국가 R&D 추진 등 법률과 제1차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과 사업 추진
- 건축자산 부문은 여전히 정책의 초기 단계로 건축자산 보전·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역에서 관련 정책 추진의 실행력 담보를 위한 기반 마련이 요구
- 한옥 부문은 2010년 ‘신한옥플랜’ 발표 이후 정책 추진 및 산업화의 기반 마련과 선도모델 구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, 최근 한옥 건립 추이가 다소 정체를 보이고 있고, 그간 추진된 기술 개발의 확산과 새로운 한옥 수요 창출이 요구
- 제1차 기본계획이 2020년 종료됨에 따라 그간 추진된 정책성과와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의 여건 변화 분석을 통해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 필요

② 그간의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추진 현황과 여건 변화

●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추진 현황

-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‘건축자산의 가치 공감’과 ‘생활 속에서 누리는 건축자산’을 목표로 6대 실천과제, 16개 세부 실행계획, 38개 세부사업이 제시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|
| 건축자산의 가치 공감 | 1. 건축자산 총조사 지원 건축자산 기초조사 기반 구축 및 기록화 프로그램 등 | 2. 건축자산 기초연구 건축자산 용어, 유형·가치 및 스토리텔링 요소 발굴 등 | 3. 국민공감 확산 건축자산 우수사례 발굴 공모전 및 주민참여형 교육 실시 등 |
| | 4. 한옥 조성 확대 특화형 한옥마을 조성, 한옥 공공건축물 보급 활성화 등 | 5.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리모델링 기술지침 개발, 지역별 클러스터 등 산업 기반 조성 | 6. 건축자산 활용 선도 공공 우수건축자산 활용 지원 및 건축 자산 진흥구역 시범사업 추진 등 |
| 생활 속에서 누리는 건축자산 | | | |

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목표와 실천과제

- 제1차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6대 주요 실천과제에 따른 38개의 세부사업 중 총 29개 세부사업(76.3%)을 이행 완료 및 부분 이행
- 미이행된 세부사업은 대부분 추진주체 불명확 또는 유관 부처 간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 미흡이 주요 원인
 - 예산 확보, 조직 신설 등이 필요한 세부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시행기간(5년) 내 추진 난이도가 높아 계획 기간 내 이행 난항
 - 국가한옥센터의 한정적 기능 및 권역별 건축자산 진흥 지원조직 부재로 연구·정책·홍보 등의 세부사업 실적 미흡

● 건축자산 부문의 주요 정책성과

-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법령 개정 등 법·제도적 기반 확대
 - 진흥 시행계획, 건축자산 기초조사, 건축자산 특별회계, 건축기준 등과 관련하여 건축자산 진흥 정책기반 확대를 위한 「한옥등건축자산법」 일부 개정
 -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11개 광역지자체에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 수립되었고, 18개 지자체에서 한옥 등 건축자산 관련 조례를 제정
-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정보 구축
 - ‘건축자산 기초조사 실시 가이드라인’ 배포,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시스템 구축, 건축자산 기초조사 애플리케이션 개발·보급 등
 - 8개 광역지자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한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으며, 총 5,293건의 건축자산 정보 구축

-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, 건축자산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등 진흥정책 추진
 -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(지정 완료 3개소, 지정 추진 9개소) 추진 및 우수건축자산 등록(12개소 등록 완료) 등 지역의 건축자산 보전·활용을 위한 정책수단 구체화
 - 2018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지역특화 사업으로 ‘건축자산 연계형’ 사업 추진

● 한옥 부문의 주요 정책성과

- 신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한옥 산업화 추진
 - 한옥 전통기술 계승 및 현대화를 위해 2008년부터 국가R&D사업을 추진하여 특허·실용신안 64건, 시제품 50건 등 건축비 절감 및 성능 향상 관련 기술개발 성과 도출
 - 한옥의 품격 및 품질을 제고하고 한옥 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5년간의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총 871명의 전문 인력 배출
- 공공 부문의 적극적 지원을 통한 한옥 보급·확산 도모
 - 지역 한옥 공공건축물 보급을 위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지자체 한옥건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총 36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옥 공공건축물(총 101채) 조성 지원(국토교통부)
 - 지자체별 한옥건축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1,230채의 민간 부문 한옥건축 지원(2017년 기준 건축된 한옥의 64%가 보조금 지원을 통해 건축)
-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기준 마련
 - 전통건축양식의 창조적 계승을 도모할 수 있는 「한옥 건축 기준」(2015.12.) 마련
 - 재해·재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「소규모건축구조기준」 ‘전통목구조편’을 제작·보급

● 건축자산과 한옥 관련 여건 변화

- 저성장 기조에 따라 대규모(재)개발에서 소규모·점진적 개발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재생·정비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기반 구축 필요
-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이슈가 급속히 부각되면서 디지털 기반이 취약한 한옥 등 건축자산 관련 기술·산업도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기술혁신 방안 모색 필요
-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건축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건축자산 및 한옥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 개발 및 대체성능 기준 마련 필요
-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문화재청(등록문화재,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), 산림청(목조건축 활성화), 문화체육관광부(문화도시 사업) 등 한옥 등 건축자산 관련 정책을 활발히 추진 중인 여러 부처 간의 정책 및 사업 연계 필요성 증대

③ 진흥정책의 문제점과 원인 진단

● 건축자산 부문

- (건축자산 방치 및 활용 저조) 건축자산의 개념이 광범위하고, 법령에서 규정한 진흥수단의 실행이 미진하며, 한옥에 집중한 정책 추진으로 건축자산 관련 정책 이슈화 노력은 미흡

| 원인 | 내용 | 대응 방안 |
|----------------|--|---|
| 건축자산 개념의 불명확성 |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건축자산의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고 한옥-건축자산 간 위계 불명확 | 정책대상으로서 한옥과 건축자산의 개념 및 위계를 명확히 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고, 법률에 명시된 진흥 수단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수단을 마련할 필요 |
| 건축자산 관리체계 미흡 |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흥수단의 실행이 미흡하고, 지자체 건축자산 지원부서도 불분명 | |
| 건축자산 정책 이슈화 부족 | 그간 한옥 분야에 집중한 정책 추진으로 건축자산과 관련한 정책이 이슈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 | |

- (건축자산의 무분별한 가치 훼손 및 멸실 지속)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비해 건축자산 가치 인식은 미흡한 상황이나, 「한옥등건축자산법」은 건축자산의 훼손·멸실 방지의 규제수단으로서 한계

| 원인 | 내용 | 대응 방안 |
|--------------|--|---|
| 건축자산 가치인식 부족 |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비해 건축자산에 대한 가치 인식은 미흡한 상황 | 건축자산 관련 주체별로 인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홍보·교육을 국가·지자체 차원에서 강화하고, 보존·활용 촉진 및 멸실 방지를 위한 제도 합리화를 추진할 필요 |
| 제도적 장치 미흡 | 「한옥등건축자산법」은 진흥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건축자산의 훼손 및 멸실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수단으로서 한계 | |



(구)농촌진흥청 도서관 철거 전후

출처: 윤원식. (2019). 농촌진흥청, 문화재적 가치 있는 구 도서관 건물 전격 철거. YBC 연합방송. 10월 9일 기사.



(구)오쿠다정미소 철거 전후

출처: (좌) 이보령. (2020). 인천 일제수탈역사 상징 '오쿠다 정미소' 결국 철거. 인천투데이. 5월 6일 기사, (우) 인천in. (2020). 오피스텔 신축으로 철거 위기 몰린 근대산업유산. 4월 5일 기사.



- (건축자산 진흥 사업 추진 미흡)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및 견인책과 유관부처의 정책·사업과 연계한 부처협업형 정책 및 사업 추진 노력 미흡

| 원인 | 내용 | 대응 방안 |
|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 견인책 부족 | 「한옥등건축자산법」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 및 견인책 추진 미흡 | 지역·민간의 건축자산 보존·활용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의 선도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,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처협업형 정책·사업을 발굴·추진할 필요 |
| 부처 간 협력체계 미흡 | 문화체육관광부, 문화재청 등 유관부처의 정책·사업과 연계한 부처협업형 정책 및 사업 추진 노력 미흡 | |
| 도시재생 사업 연계의 어려움 |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방안이 추진되었으나, 사업비 집행 기준 등의 제약으로 사업추진에 한계 |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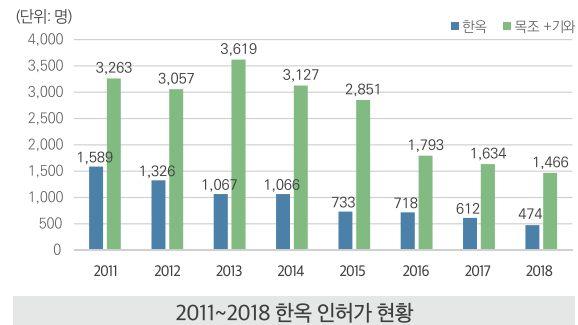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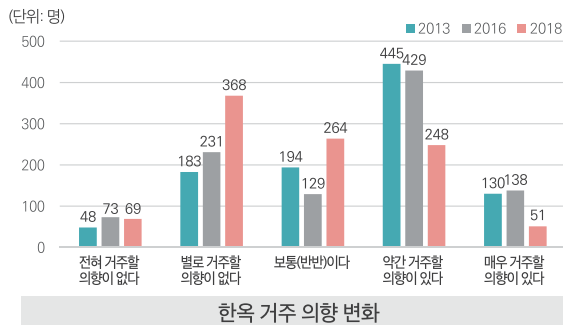
- (건축자산 관련 사업 기반 미흡) 건축자산 특성을 고려한 기준 및 기술 개발, 전문인력 등이 부족하며, 소유주, 활용주체, 전문가 간의 소통 및 연결을 위한 장치 부재

| 원인 | 내용 | 대응 방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건축자산 기준 마련 및 기술 개발 미흡 | 안전성과 에너지성능 등에 취약한 건축자산의 특성이 반영된 기준 마련 및 기술 개발 미흡 | 건축자산을 효과적으로 보전·활용하기 위한 기준·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, 건축자산 관련 주체 간의 연계 플랫폼을 구축·운영할 필요 |
| 전문인력 부족 | 건축자산의 보전·활용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나 비전문가가 설계·공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 | |
| 소유자-활용자-전문가 간 소통 부재 | 건축자산 소유주, 건축자산 활용주체, 건축자산 전문가 간 상호 소통 및 연결을 위한 장치 부재 | |

● 한옥 부문

- (한옥 수요 정체) 한옥은 비싸고 불편할 것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높으며, 체험기회 제공 효과가 큰 한옥 공공건축물의 조성도 미흡

| 원인 | 내용 | 대응 방안 |
|----------------|--|---|
| 한옥에 대한 부정적 인식 | 한옥은 일반 건축물 대비 비용 부담이 크고 생활이 불편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한옥 거주수요가 정체 | 한옥 공공건축물 확대 등으로 생활 속 한옥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한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편의성과 경제성이 향상된 한옥모델을 개발할 필요 |
| 높은 정부 의존도 | 대다수 한옥 건축이 지자체 보조금 및 세제혜택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발적 한옥 건축을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은 미흡 | |
| 한옥 공공건축물 보급 미흡 | 국민들이 일상에서 한옥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옥 공공건축물의 조성 정책 및 성과 미흡 | |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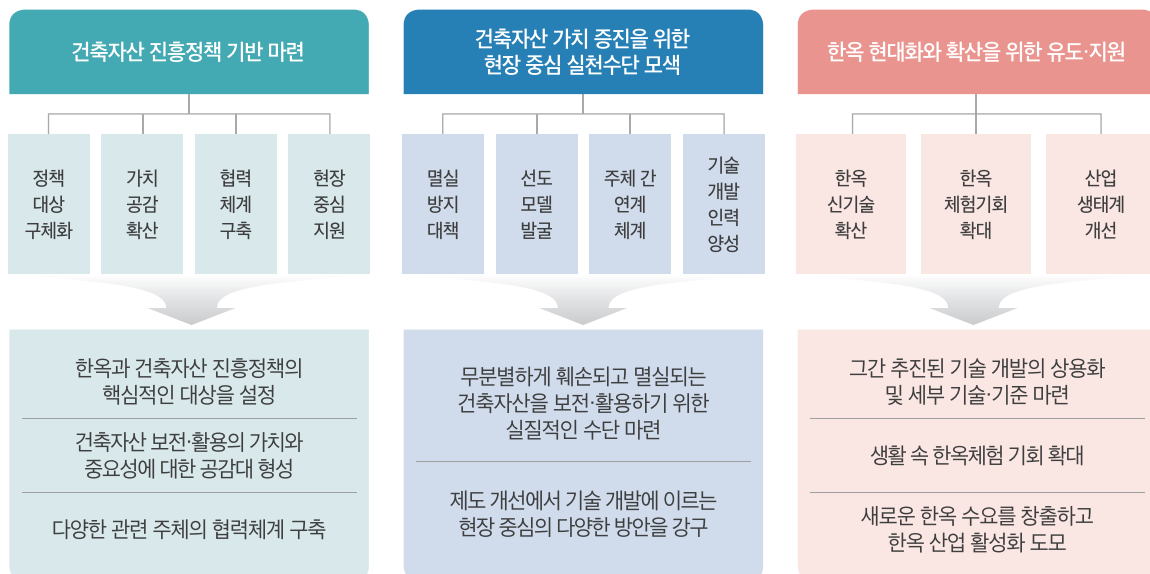
- (한옥기술 낙후 및 관련 산업의 영세성) 그간 개발된 한옥건축 기술의 민간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, 세부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확산 및 활성화도 다소 미진

| 원인 | 내용 | 대응 방안 |
|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신기술 상용화 및 확산 전략 부재 | 국가R&D사업을 통해 개발된 한옥 건축 기술의 민간 시장 확산 및 상용화 전략 부재 | 한옥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위한 세부기술 추가 개발과 기 개발 성과의 상용화 및 범용화를 추진하고 한옥 전문업역 정착을 위한 지원·유도 정책을 추진할 필요 |
| 세부기술 개발 및 기준 마련 미흡 | 한옥 건축의 용이성과 성능 제고를 위한 세부기술 개발, 한옥 품질 향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미진 | |
| 전문인력 정착 노력 부족 | 한옥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전문자격 제도의 부재, 정착 지원 미흡으로 한옥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한계 | |

4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¹⁾

● 건축자산과 한옥의 주요 정책 이슈

-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진 기반 마련 필요
 - 건축자산 개념을 명확히 하여 정책·사업 추진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, 역사성·정체성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공감·공유할 수 있는 건축자산의 가치 인식 제고 노력 필요
 - 중앙 지원-지역 주도의 정책·사업 추진체계를 정립하고, 부처 간 협업, 민관협력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·참여 확대 필요
- 현장 중심의 건축자산 가치 증진 실천수단 모색 필요
 - 지역 건축자산의 무분별한 훼손과 멸실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, 건축자산 보전·활용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선도모델을 조성할 필요
 - 소유자, 활용자, 전문가, 시민단체, 민간기업 등 건축자산과 관련한 주체 간의 연계를 위한 체계 마련과 함께 건축자산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필요
- 한옥의 현대화와 확산을 위한 유도·지원 정책 필요
 - 그간 추진된 한옥 R&D 성과를 확산하고 건축비 부담 경감, 친환경건축, 안전관리 등 한옥의 건축적 취약성 개선 필요
 - 한옥에 대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다양한 건축양식과 한옥(형) 공공건축물 확산을 통한 생활 속 체험기회 확대



1) 주요 내용은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별로 일부 대표 실천과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, 전체 실천과제에 대한 내용은 p.11의 총괄표로 종합하여 제시

●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(비전-목표-추진전략)



● (추진전략 1) 건축자산 진흥정책 추진 기반 강화

- 정책대상으로서 건축자산 구체화 및 관리체계 마련
 - (건축자산 범위 구체화) 시·도지사가 정책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건축자산의 등재 절차 및 관리기준 마련
 - (전문위원회 설치) 건축자산 진흥정책 추진의 전문성 강화 및 혼선 방지를 위해 '시·도 건축자산 전문위원회' 설치 법제화

※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역할(안) :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,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, 우수건축자산 등록 및 특례 적용 등에 관한 심의 시 전문위원회 위원 참여 또는 자문 등

- 건축자산 인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홍보·교육 강화
 - (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) 일반인, 공무원, 건축자산 소유주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춘 지역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
 - (건축자산 홍보 거점 마련) 국립도시건축박물관(2025년 개관 예정) 및 지역 박물관·전시관 등을 건축자산 홍보 거점으로 활용

- 범정부적 협력형 사업 발굴 및 추진

- (부처 간 협력형 시범사업 추진)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유관부처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계사업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

※ 국토교통부 사업과 연계 가능한 유관부처 사업 : (문체부) 유휴공간 문화재생 활성화 사업, 문화도시 조성사업, (문화재청)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, (농림부) 어촌뉴딜300 등

- (건축자산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확대) 건축자산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을 확대 선정(1개소 → 3개소)하고, 건축자산 보전·활용을 위한 사업비 집행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

- 건축자산 진흥 지원주체 설립 및 확대

- (국가센터 역할 확대) 건축자산 진흥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·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한옥센터의 역할 확대
- (권역별 건축자산 지원조직 운영) 광역 또는 건축자산 거점 지자체에서 권역별 건축자산 진흥 시책 지원을 위한 지원조직 신설 운영

● (추진전략 2) 건축자산 가치 증진 및 시장 활성화

- 보전·활용 촉진 및 훼손 방지를 위한 제도 합리화

- (인센티브 강화)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조세 감면을 현실화하고 관리·소요비용 지원 확대 추진하여 건물주의 건축자산 관리 유도
- (제도 합리화) 건축자산의 건축행위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건축규제 합리화 및 건축 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추진

- 건축자산 보전·활용 선도모델 조성

- (우수 건축자산 보전·활용 시범사업 추진) 지자체에서 우수건축자산을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

※ 매년 3~4개소, 5년간 전국 17개 시·도에 1개 이상 우수건축자산 리모델링 및 활용을 추진하고, 중앙 정부는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우수건축자산의 리모델링 과정 및 활용성과 등 모범사례 발굴·확산 유도

- (건축자산 진흥구역 정비 지원)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도로,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재정 지원

- 소유자·활용자·전문가 연계 플랫폼 구축·운영

- (건축자산 우수 사업체 정보 구축) 건축자산의 보전·활용에 관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·사업체를 발굴하여 수요자에게 정보 제공
- (건축자산 플랫폼 구축·운영) 소유자·활용주체-전문가 상호간 손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건축자산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

- 리모델링 관리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

- (건축자산 리모델링 등 기술 개발) 건축자산의 유형별 리모델링 기법 연구와 안전 및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추진
- (건축자산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) 건축자산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, 사후관리 시행

● (추진전략 3) 한옥의 현대화 및 다양화

- 한옥 신기술 개발·보급 확대

- (한옥 부재 표준화) 건축공사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목재 부재 표준화를 통해 공사비 절감 및 한옥의 대중화 도모
- (친환경 및 방재기술 개발) 기후변화에 따른 건축기준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에너지, 구조, 화재 분야 등의 성능향상기술 개발

- 한옥건축양식 확산 유도

- (한옥 설계요소 발굴) 한옥의 구조, 재료, 형태 등 한옥건축의 디자인 및 특성을 드러내는 한옥 건축양식 설계요소 발굴
- (한옥건축양식 우수사례 발굴) 공모전, 시범사업 등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한옥건축양식 유형화 연구 추진

- 다양한 용도의 한옥 보급 확대

- (한옥(형) 공공건축물 조성사업 추진)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시설을 한옥(형)으로 조성하고 장기체류형 체험시설 확충



서울 종로구 청운문화도서관



서울 노원구 수락한옥어린이집



충남 부여군 한옥생활체험관

- (한옥 지원기준 합리화) 주거 중심의 지원 대상을 비주거용 한옥으로 확대하기 위해 용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원기준 마련

- 한옥 산업 전문성 강화

- (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마련)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한옥건축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자격제도 운영
- (한옥 정보 플랫폼 구축·운영) 한옥 (예비)건축주가 손쉽게 관련 전문가·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및 운영

● 추진전략별 추진과제 및 세부실천과제

| 추진전략 | 추진과제 | 세부실천과제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건축자산 진흥정책 추진 기반 강화 | 1-1. 정책대상으로서 건축자산 구체화 및 관리체계 마련 | 건축자산의 법적·정책적 범위 구체화 |
| | | 건축자산 기초조사 지원 |
| | | 건축자산 통계 구축 |
| | | 지자체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설치 |
| | 1-2. 건축자산 인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홍보·교육 강화 | 건축자산 홍보 콘텐츠 개발 |
| | | 건축자산 우수사례 발굴 |
| | |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·시행 |
| | | 도시건축박물관 등 건축자산 홍보 거점 마련 |
| | 1-3. 범정부적 협력형 사업 발굴 및 추진 | 중앙부처 간 협력형 사업모델 개발·추진 |
| | | 건축자산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확대 및 실효성 제고 |
| | | 중앙정부-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|
| | | 국가한옥센터의 건축자산 역할 확대 |
| 2. 건축자산 가치증진 및 시장 활성화 | 2-1. 보존·활용 촉진 및 훼손 방지를 위한 제도 합리화 | 권역별 건축자산 지원조직 운영 |
| | | 건축자산 관련 민간주체 활성화 |
| | | 우수건축자산 보존·활용 인센티브 강화 |
| | | 건축자산에 대한 법규 적용 합리화 |
| | 2-2. 건축자산 보존·활용 선도모델 조성 | 건축자산 보존·활용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가이드라인 개발·보급 |
| | | 건축자산 진흥 특별회계 실효성 확보 |
| | | 우수건축자산 보존·활용 시범사업 추진 |
| | | 건축자산 진흥구역 정비 지원 |
| | 2-3. 소유자·활용자-전문가 연계 플랫폼 구축·운영 | 건축자산 기초조사 체계 개선 및 조사결과 활용 추진 |
| | | 건축자산 관련 우수 사업체 정보 구축 |
| | | 온라인 건축자산 보존·활용 플랫폼 구축·운영 |
| | | 건축자산 유형별 리모델링 기술 개발 |
| 3. 한옥의 현대화 및 다양화 | 3-1. 한옥 신기술 개발·보급 확대 | 건축자산의 합리적 성능기준 마련 |
| | | 건축자산 전문인력 양성 추진 |
| | | 한옥건축 부재 표준화 |
| | | 친환경 및 방재기술 개발 |
| | 3-2. 한옥건축양식 확산 유도 | 목조건축 활성화 연계사업 추진 |
| | | 한옥 설계요소 개발 |
| | | 한옥건축양식 우수사례 발굴 |
| | | 한옥건축양식 확산을 위한 지원수단 마련 |
| | 3-3. 다양한 용도의 한옥 보급 확대 | 한옥 신기술 자문단 및 협의체 운영 |
| | | 한옥 공공건축 조성 시범사업 추진 |
| | | 한옥 지원기준 합리화 |
| | | 한옥 전문인력 양성 확대 및 자격제도 마련 |
| | 3-4. 한옥 산업 전문성 강화 | 한옥 전문가-소비자 연계 플랫폼 구축·운영 |
| | | 한옥건축기술지원센터 지정 및 설립 |

⑤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추진 방안

●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기반의 정책 추진체계 정착

- 정책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(국가)-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(지자체)-사업추진(현장)의 정책·사업 추진체계 정착

- 기본계획 시행에 맞추어 지역별 시행계획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-광역 협의체, 전문기관(건축공간연구원)을 통한 추진현황 점검 및 지원 강화

● 중점 추진과제 설정 및 성과지표 기반의 정책 추진

-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실천과제 중 시급성,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점 추진 과제 선정(제3차 건축정책 기본계획과 연계)
-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마련하고, 2년 주기로 성과 측정 실시

● 중앙 지원-지자체 실행·관리의 정책 추진체계 정립

-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(광역시) 건축자산 소관 부서 등이 참여하는 건축자산 추진협의체 구성·운영을 통한 정책 추진체계 구축
-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중심으로 건축자산 정책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여 부처 및 기관 협력형 사업모델 발굴·추진, 지자체 지원방안 모색 등 추진

● 시민과 민간이 함께하는 참여형 거버넌스 정착

- (시민) 건축자산의 가치에 대한 홍보·교육 자료를 발간·확충하고, 학교, 주민센터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·교육 추진
- (민간단체) 한옥, 건축자산과 관련한 민간 차원의 활동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, 세부 지원방안 마련, 근거법령 개정 추진
- (기업) 건축자산의 보전·활용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활동 참여 독려 및 우수사례 홍보 추진

● 「한옥등건축자산법」 등 개정

- 기본계획의 실천과제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기본계획 1년차에 「한옥등건축자산법」 개정을 통해 우선 추진
- 지역 차원의 한옥 등 건축자산 정책을 안정적,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「한옥등건축자산법」에 따라 조례 등의 제정 가속화

염철호 선임연구위원 (044-417-9677, chyoun@auri.re.kr)

김가람 연구원 (044-417-9641, grkim@auri.re.kr)

유예슬 연구원 (044-417-9618, ysyoo@auri.re.kr)